

수도권서 출퇴근족 많아 ‘반쪽 행복’ 경쟁력 못갖추면 ‘빛가람’도 빛 잃어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역할 완공의 해 (12)

공동혁신도시 ③ 세종 ‘행복도시’는 지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와 행복도시는 성격, 형태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인 두 도시 모두 광주와 대전이라는 배후 광역시를 가지고 있으며, 나주시와 세종시 내에 자리하고 있다.

빛가람 도시는 인구 5만명 목표로 면적 733만4000㎡, 행복도시는 인구 50만명에 면적은 7291만㎡다. 행복도시를 10분의 1로 축소하면 빛가람 도시라는 것이다.

행복도시가 빛가람과 다른 점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 세종시 자체가 ‘특별자치시’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 규모가 커 2030년까지 단계별로 조성된다는 점, 개발 주체에 정부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다.

◇22조5000억원 투입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신행정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광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정부가 8조5000억원, LH가 14조원을 투자하는 ‘매머드급’ 도시다. 2015년까지 17조원을 투입해 부처 및 기관 이전, 도시기반 집중 개발로 15만명이, 2020년까지 3조5000억원을 들여 도시 자족기능 구축 등으로 30만명이, 마지막 3단계로 2조원을 투입해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50만명이 거주하는 ‘3단계’ 계획에 의해 개발이 한창이다.

지난해 말까지 17개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안전행정부 등을 제외한 12개 주요 경제·사회 부처와 종리실이 2단계로 나뉘어 이전해 세종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세종시는 면적 464.8km²로 서울시의 77% 정도이며, 옛 연기군 전체와 광주시, 청원군 일부가 포함돼 있다. 현재 인구는 12만1538명이다.

도시 전체를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21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기에 총 20만호의 주택이 단계별로 공급될 예정이다.

◇깊어지는 행복도시건설청의 고민=인구 50만명 규모의 대도시인 행복도시의 도로는 편도 4차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좁다. 이유는 도시 도로망을 자가용이 아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중심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의 교통분담률을 무려 70%로 정해뒀다. 도시 내 차량 통행량을 줄여 페더함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계획’과 ‘현실’의 괴리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자가용에 익숙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이 원숙하게 정착하기 전까지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초고층 아파트들의 지나친 배치

빛가람도시 10배 확대판

행정수도 논란 조성 지역

정주여건·교통·교육 등

차별화 전략 마련에 고심

가 도시 전반을 살피면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은 시발점전경과 이공민 사무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수장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공모로 선정된 민간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다”며 “다른 건설업체를 유인하면서 좋은 조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속철도나 광역도로를 행복도시와 가깝게 둘 수도권이나 대전 등지와의 소통을 편리하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교통여건이 나아질수록 ‘정주’보다는 ‘출퇴근’에 무게를 두는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30~40대의 경우 투자 가치는 40~50대는 교육여건, 60대 이상은 편의성과 페더함 등을 주구하는 등 세대별로 각각 다르게 느끼는 도시의 매력을 단기간에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교육여건 높이고 도시 특징 살려 야=건설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교육여건이다. 유·초·중·고등 세종시의 162개 학교(현재 14개 개교)를 모두 정보통신기기로만 수업하고 배우는 ‘스마트 스쿨’로 만들 방침이

행복도시 10배 확대판

광주광역시

배후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목표인구	50만	5만
면적	7291만㎡	733만㎡
사업비	22조 5000억원	1조 3222억원
이전기관	정부 17개 부처	한전 등 16개



다. 정주를 가장 망설이는 부처 및 기관의 30~50대에게 수도권·대전보다 뛰어난 교육시스템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첫 졸업생을 내는 고3의 대학 입시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가 좋을 경우 정주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수의성 위주의 ‘분양’만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임대’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가수요’를 ‘실수요’로 바꾸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재 도시건설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도시계획 리뷰 응례’를 밟주했다.

건설청 한 관계자는 “정주 및 교육여건으로 수도권 등과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을 계속 키우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빛가람도시 역시 광주시, 그리고 다른 혁신도시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모두 21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 행복도시 내 가장 먼저 주민들이 입주한 첫마을. 전국 각지의 신도심 일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 대도시와 비교해 어떤 도시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행복도시와 빛가람도시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이 DJ”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기념관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밀접인형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DJ 고향서 지방자치 7대 약속

3대 비전 제시도

3월 청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23일 목포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7가지 국민 대약속을 발표했다.

안 의원 측 신당 청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진주위원회’(새정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고 ‘미래 통합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지방자치 3대 비전과 국민과의 7대 약속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약속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예산주민총회를 꾸려 차지예산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주민투표 대상 제한을 해제해 재정이나 인사, 공공시설 설치 등 주요사안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민투표 설립요건도 지역주민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을 제정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일으키거나 지방의 세수 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정 책임도를 높이고, 지방재정 파산법을 제정해 지자체 부채 문제가 심각할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권한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채 방지를

위해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차감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주민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방의회의 경제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부를 독립시키기로 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새 정치의 시작은 7대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새 정치의 핵심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장애인 복지와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 문제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문제 ▲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문제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안신당이 지지자 명의 무단 도용”

일부 전 지방의원들 반발

지난 22일 광주·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113명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 데 대해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식 전 광주시의원은 23일 “현직 시의원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무턱대고 ‘도와달라’해 ‘그렇게 하세’라고 했는데 내 이름이 안철수 신당 지지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며

자신의 이름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당원인 김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때 민주당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라며 “앞으로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병원 전 광주동구의원도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내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내 이름을 무단으로 옮긴 모

시의원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경도 전 광주 서구의원도 “내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 것처럼 알려졌다면 이름이 도용당한 것”이라며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지지선언을 했다는 113인 중 5명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철수 지지 세력의 도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segistar.co.kr)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

국제품질 ISO 9001 인증

국제인증 IEC 0120

유럽공통체 CE 표지

미국 GMP 표지

의료용품 제조업체 티크로인증

제조업체 티크로인증